

## 제2공항 공무원 투기 의혹 조사 “글썸”

원 지사 어제 온라인브리핑 통해 조사계획 발표  
동명인 추출 감사위 전달... “위법성 조치·공개”  
조사대상 현직 공무원·2015년 성산읍 지역 한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주도가 자체 조사에 나선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도내 현직 공무원으로 한정된 데다 조사 기간과 지역은 2015년도 성산읍에서 이뤄진 토지거래 신고 내역으로 제한되면서 전직 공무원이나 차명 또는 친인척을 이용한 투기, 국토부 공무원·용역진 등은 대상에서 배제돼 의혹 규명에 한계가 예상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도청에서 온라인브리핑(사진)을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3월 말까지 조사해 도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이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 투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가 실시하는 이번 자체 조사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2015년도에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이뤄진 토지거래신고 내역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실거래신고 자료에 개인정보 등의 건을 대조·비교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현재 재직 중인 도 소속 모든 공무원이다.

제주도는 공무원의 개인정보 등의 서를 확보한 뒤 실거래 신고 자료와 비교분석해 동명인을 추출,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인다. 이후 감사위원회에서 추출된 동명인의 부동산투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직 공무원의 명단과 거래 내역을 대조하는 기본적인 조사에 그치면서 이번 자체 조사가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우선 조사 대상이 현직 공무원으로 한정되면서 차명이나 친인척을

이용한 투기 여부를 밝혀내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15년 한 해 동안 성산읍에서 이뤄진 토지거래 신고 내역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퇴직한 전직 공무원 1465명에 대한 투기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지의 여부도 의문이 뒤따른다.

아울러 제2공항 입지 선정에 관여해 정보 접근이 가능했던 국토연구원 용역진과 국토부 직원들도 조사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자 색출엔 한계가 예상된다. 이 부분에 대해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은 “국토부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토지거래 내역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이름을 대조해 같은 이름을 가진 공무원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며 “보다 교묘한 수법의 투기에 대해선 본격적인 수사권을 가진 수사당국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희기자 dhkang@ihalla.com



봄기운 한껏 머금은 튜립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공원에 튜립이 화사한 꽃을 피워 올리며 남국의 봄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강희만기자

## 오늘 ‘제주 사상 최대의 재판’ 열린다

16일 4·3수형인 335명 ‘재심 선고’ 진행  
총 21건으로 나눈 뒤 오후 6시까지 실시

오늘(16일) 제주에서 최대 규모의 재판이 열린다. 재심 결정을 받은 제주4·3 수형인 335명(생존인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4·3 당시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335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들은 1948~1949년 사이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법한 절차없이 군사재판에 회부돼 실형을 선고 받고 육지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이다. 생존인 2명을 제외한 333명은 6·25전쟁 발발로 인

해 총살 혹은 행방불명되면서, 이날 재판에는 유가족이 대신 참석한다. 재판은 총 21건으로 나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20분 간격으로 진행된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하루 300명이 넘는 피고인에 대해 선고를 내리는 이유는 재판 당사자 대부분이 고령이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수형인 유가족 7명이 재심 절차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이날 법원 안팎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돼 재판에

는 관련자만 출석토록 할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원한다면 최대한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제주지법에서는 종달리 6·6사건 당사자 고태삼(93) 할아버지와 북촌 빠라 사건의 당사자 이재훈(92) 할아버지가 재심 선고를 받는다. 6·6사건은 1947년 6월 6일 민청단원들과 경찰관이 충돌해 경찰이 집단 구타당한 사건으로, 고 할아버지는 당시 조선민주청년동맹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렀다. 이 할아버지는 1947년 8월 13일 경찰이 빠라 단속 과정에서 북촌마을 주민에게 총격을 가한 것에 항의하다 체포, 일반재판을 거쳐 옥살이를 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도, 국유림 1만7000ha 대상  
경영계획수립 산림기초조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자치도는 국유림 내 산림생태계 보호 및 다양한 산림기능의 최적 발휘를 위한 제8차기(2023~2032년) 국유림경영계획 수립 산림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8차기 국유림 경영계획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국비 2억3900만원을 투입해 도내 국유림 1만7072ha에 국유림 대상 지역 산림기초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국유림 산림기초조사는 제8차기 국유림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기초조사로 산림이 가지는 공익적·경제적 기능이 최적 발휘,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고대모기자

## 도의 거주자 제주 농지 취득 큰 폭 줄어

올해 198ha... 2015년 比 66%↓  
도, 농지기능 관리 지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5년동안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벌여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2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4월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세부 실행계획’ 수립 후 2019년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벌여 총 1만2158필지·1226ha에 농지처분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6개월 간의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

유자 401명·23.5ha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2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 등의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 지 조사하는 제도이다.

또 농지전용 면적은 2016년 907ha로 최대치를 보였으나 농지취득 후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불허하는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적용한 이후 2017년부터 농지전용 규모가 400ha 내외로 감소했다.

특히 도내에 거주하지 않은 자의 농지 취득은 올해 198ha로, 2015년 596ha 대비 66.7% 감소했다. 고대모기자

SINCE 1989  
**한라일보**  
32  
주년

##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무한한 상상력으로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고 미래를 지향하는 기술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열정과 도전으로 제주도민들께서 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世紀建設株式會社**